특집 II

4월혁명의 기억과 제도화

4월혁명 직후 학생운동의 '후진성' 극복 지향과 동요 오제연

4월혁명 기억의 제도화와 사회적 결과 홍성태

4월혁명 직후 학생운동의‘ 후진성 ’ 극복 지향과 동요

오제연
서울대국사학과강사

<논문요약>

1960년 4월혁명 직후 학생들은 한국사회의 핵심모순을 ‘후진성’에서 찾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혁명의 완수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계몽운동’과 ‘통일운동’이라는 방법론이 각각 모색되었지만, 그 속에는 자립경제 수립을 통한 후진성 극복이라는 공통의 한국사회 발전(혹은 변혁)지향이 담겨 있었다. 단, 계몽운동에서는 자립경제 지향이 내핍이나 국산품 애용과 같은 수준에서 제기된 반면, 통일운동에서는 외세의존청산, 남북교류, 분단극복이라는 수준에서 제기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두 운동 모두 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몽운동은 단순한 내핍, 국산품 애용 캠페인을 넘어 거리에서의 직접행동으로 나아가고 또 당시 원조경제의 정점에 서 있는 미국을 직접 문제삼기도 했지만, “학생은 순수하다” 혹은 “순수해야 한다”는 인식의 벽에 막혀 정치적 소극성을 드러냈다. 통일운동 역시 남북학생회담 제안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나 반공 논리의 거센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곧바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 대중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도 동요의 한 요인이었다.

■주요어: 4월혁명, 계몽운동, 통일운동, 후진성, 자립경제

1. 머리말

4월혁명의 주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집단은 학생이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1960년 4월 19일 이전부터 항쟁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대학생들은 4월 19일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다. 특히 대학생들은 4월 26일 이승만 하야 이후에도 허정 과도정권과 민주당 장면 정권하에서 한국사회 변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전개했다. 지금까지의 4월혁명 관련 연구에서 학생운동이 비교적 많이 다루어진 것도, 4월혁명에서 학생들의 역할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정기영과 고성국은 당시 학생운동 세력을 '학생 A' 형과 '학생 B' 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학생 A' 형은 학도호국단, 공명선거추진위원회 참여집단, 홍사단 등 형식적 민주주의를 강하게 제기했던 집단으로서, 이승만 정권 붕괴 후 학원민주화운동, 농촌계몽운동, 신생활운동 등 개량적 운동을 추진하였다. 반면, '학생 B' 형은 신진회, 신조회, 협진회, '암장' 그룹, 농업사회연구회 등 구체적인 민주변혁을 지향하는 집단으로서, 이승만 정권 붕괴 후 분단국가에서 민주변혁의 주요한 과제인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촉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정기영과 고성국은 이 두 흐름을 상호 분절적, 대립적으로 파악하면서, '학생 A' 형이 주도한 학생운동이 점차 '학생 B' 형이 주도한 학생운동에 주도권을 내어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정기영 1990, 123-133; 고성국 1990, 150-153).

그러나 4월혁명기 학생운동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은 이후 비판에 직면했다. 박찬호는 4월혁명을 거치면서 학생운동 세력이 분화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농촌계몽운동, 신생활운동 등이 한계에 부딪히자 '학생 A' 형이 '학생 B' 형에 합류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는 민통련이 주도한 학생운동이 단순히 소수 진보적 학생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광범한 대중적 기반을 획득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보았다(박찬호 1991, 219-

220). 정계정도 일부 대학의 경우 계몽운동의 선언문이나 강령을 작성하고 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이들은 신진회와 같은 선진 서클의 회원들이었고, 계몽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운동의 진행과정 속에서 의식의 발전을 보이고 자주화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즉 양자를 분절해 인식하지 말고 계기적 발전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정계정 1997, 475-476).

문제는 '학생 A' 형과 '학생 B' 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다. 물론 이 두 부류의 운동은 주도세력과 운동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두 부류의 운동 사이를 관통하는 당시 학생운동의 지향이다. 이를 해명해야만 4월혁명기 학생운동의 구도는 물론 당시 학생들의 인식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4월혁명 직후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학생회 중심의 운동과 민족통일연맹(민통련) 중심의 운동으로 나누어 정리한 후, 이 두 흐름의 학생운동을 관통하는 지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두 흐름의 학생운동이 분절적, 대립적인가 아니면 계기적으로 발전한 것인가를 따지기 보다는, 당시 학생운동 주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사회 발전(혹은 변혁)지향' 의 유사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전개된 당시 학생운동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동요 양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학생회 건설과 계몽운동

1) 학원민주화운동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이승

만 정권의 12년 독재가 막을 내렸다. 많은 희생을 치르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학생들은 이 항쟁을 '혁명'으로 평가하면서 혁명의 주체임을 자임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 학생들이 곧바로 '질서회복운동'에 들어간 것도 스스로를 혁명의 주체로 자임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수습의 길은 대학생에게 있다"라는 자각하에, 서울의 치안을 정돈하고 시민에게 질서를 호소했으며 도로를 청소하고 민간차량에 대한 불법적 횡포를 금지시켰다. 또한 경찰이 자취를 감춤으로써 야기된 치안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엄사령부와 협조하여 학교별로 '질서유지반'을 편성하여 각 경찰서에 배치했다(고영복 1983, 109-110).

물론 학생들이 혁명의 유일한 주체는 아니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학생들이 항쟁을 선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정권과 맞섰다. 특히 구두닦이, 신문팔이, 거지 등 도시빈민이 적극적으로 항쟁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종종 '밤시위'로 일컬어지는 과격한 행동을 보여주곤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사회의 엘리트였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에게 도시빈민들의 과격한 행동은 '혼란'으로 비쳤다. 이들은 4월혁명 과정에서 '과격한' 도시빈민과 '순수한' 학생을 구별하고자 했다.

이미 1960년 4월 11일부터 시작된 제2차 마산항쟁에서도 지식층 시민들은 데모 주동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한 사직당국이 낮에 이루어진 학생데모와 밤에 있었던 일반데모를 구별하기 원했다. 그들은 학생들이 주동이 된 낮 데모는 목적이 순수한 것이었으나 일부 청년층이 선도한 야간 데모는 폭행과 파괴를 수반했으므로 주간과 야간에 이루어졌던 데모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안동일 · 홍기범 1960, 188-189). 서울에서 4월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군중들이 이기붕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하자 이를 대학생들이 제지하였다. 이를 목격한 한 기자는 "대학생의 지성이 없었던들 이번 혁명의 사태는 무지한 파괴로 끝맺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였다"고 했다(이강현 1960, 264). 결국 대학생들은 이승

만 하야 이후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학생들은 순수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내세우기 어려웠던 도시빈민은 혁명의 주체에서 사라지고 학생들만 혁명의 주체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로서 학생들의 역량은 너무나 미약했다. 1950년대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엘리트였지만, 무분별한 대학의 팽창으로 인해 질적으로 하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해방 직후의 혼란, 국가의 강압적 통제, 한국전쟁의 비극은 학생들의 비판적 지성을 마비시켰다. 1950년대 중후반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학생들의 사회 비판의식이 자라나면서 자유와 민주, 민족과 주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것이 결국 4·19라는 대규모 항쟁으로 폭발하기는 했지만(오제연 2008, 195-201), 1950년대 내내 학생들을 짓누른 무기력과 보수적 타성은 쉽게 사라질 수 없었다. 무엇보다 당시 학생들에게는 힘을 모을 수 있는 분명한 조직이나 이념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뒤 곧바로 학원으로 돌아간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미 4월혁명 직후에 나온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960년 2월 28일 이후 4월 19일까지 학생들이 전개한 시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주장은 "학원의 자유" 요구였다.[1] 그 어느 곳보다 학원에서 모순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통제와 동원에 의해 유린된 학원을 먼저 정화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어떤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주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기존 연구들 가운데 학생들이 학원으로 돌아간 사실을 "이승만 하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불철저한 인식 속에서 나온 후퇴"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김동춘 1991, 254), 이는 당시 학생

1) 학생들 주장을 유형화하여 그 빈도를 살펴보면, "학원의 자유" 23%, "부정선거 배격" 17%, "부패와 독재배격" 15% 순으로 되어 있다(김성태 1960).

들의 주체적 조건과 항쟁 당시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학원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곧바로 학원민주화운동에 착수했다. 우선 어용교수의 퇴진과 그동안 학원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던 어용자치조직 '학도호국단' 의 해체를 요구했다. 학도호국단의 가장 커다란 후원자인 이승만과 자유당이 무너진 상황에서 학도호국단 해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었다. 결국 각 대학에 있던 학도호국단은 1960년 5월 3일 허정 과도정부의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모두 해체되었다. 대학 당국도 1960년 5월 13일 20개 대학 24명 학생지도 책임자들이 모여 새로운 학생 자치조직의 명칭을 '학생회' 로 통일시키기로 했다(연세춘추 1960/05/16).[2] 이후 각 학교에서는 학도호국단을 대체할 새로운 조직으로 우선 학생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들 학생자치위원회는 대학별로 명칭이나 만들어진 시기, 구성방식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모두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학생 자치조직이었다.[3] 학생자치위원회를 모체로 하여 대부분의 대학은 늦어도 1960년 말까지 선거를 통해 정식으로 학생회를 건설하였다.

물론 새로 만들어진 학생회 대부분은 인적 구성이나 실제 활동에서 과거 학도호국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생회는 학도호국단의 타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상호비방과 과열경쟁(고대신문 1960/11/19), 그리고 학생회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들로 인해(대학신문 1960/12/12; 1961/02/06) 학생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학도호국단의 재판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하였다(고대신문 1960/11/26). 이는 학생회가 이후 학생운동을 주도하지 못한 근본 이유가 되었다.

---

2) 이 회의에서 학생지도 책임자들은 학생 자치는 학교 행정에 결코 간섭 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3) 새롭게 구성된 학생자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4월혁명 직전 학도호국단 간부였던 경우가 많았다(정계정 1997, 459).

학도호국단 해체와 학생회 건설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반면, 어용교수 퇴진과 학원 내 행정체계의 민주화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었다. 어용교수 퇴진운동은 4월혁명 이전의 대학사회 부패상으로부터 야기된 논리적으로 이유 있는 운동이었다. 어용교수에 대한 비판은 이미 항쟁 과정에서 4·25 교수단 시국선언문과 고려대학교 4·19 결의문에도 잘 나와 있었다(고영복 1983, 113).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가장 먼저 어용교수 퇴진 요구가 나온 학교는 성균관대였다. 1960년 4월 29일 성균관대 학생들은 이선근 총장이 참석한 학생조회 시간에 공청회를 열고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주간성대 1960/05/04). 이선근 총장은 이승만 정권에서 문교부 장관을 역임한 대표적인 친여 인사였다. 결국 이선근은 5월 9일 총장직을 사임했다(주간성대 1960/05/18). 이후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조선대, 숙명여대 등 30여 대학에서 어용교수 또는 무능교수 퇴진운동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각 대학별로 수업거부, 동맹휴업, 단식투쟁, 장기농성, 유혈사태 등 다양하고 격렬한 형태의 운동양상이 나타났다(정계정 1997, 466-468). 서울대 미대나 한양대 등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들끼리 충돌하기도 했다.

어용교수에 대한 배척은 교수들 사이의 알력이나 개인적인 원한이 개입되어 혼탁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재단이사회를 포함한 학원 전체의 행정체계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발전하기도 했다. 6개월 이상 지속된 1960년 연세대학교의 '1·2차 파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특히 1960년 9월부터 시작된 '2차 파동'은 외국인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과 교수들의 퇴진 요구라는 구도로 진행되었고, 그 양상도 동맹휴업과 철야농성은 물론 다수의 유혈사태와 구속자를 기록할 정도로 격렬했다.[4] 결국 12월 9일 한국인 총장이 임명되면서 연세대의 학원민주화운

4) 2차 파동은 동문회의 중재로 10월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7명 교수의 출강과 농성교수단의 성명,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문과대 학생 3명에 대한 학교 측의 제적조치로 인해 11월에 들어

동은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구도 때문에 고영복, 이재오, 서중석 등의 연구는 연세대 학원민주화운동을 학생들의 민족적 의식을 각성시키고 운동이념을 민족주의로 승화시킨 계기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영복 1983, 114-115; 이재오 1984, 185-186; 서중석 1991, 131). 물론 이러한 평가는 큰 틀에서 정당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연세대 학원민주화운동이 민족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며 격렬하게 진행된 시기가 학생운동 내에서 통일운동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즉 학원민주화운동도 뒤에서 살펴볼 다른 운동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개되었던 것이다.

2) 농촌계몽운동과 신생활운동

4월혁명 직후 학원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각 대학별로 학생회를 건설하고 학원민주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주체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많은 한계도 있었지만,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모순을 해결해 나갔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체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혁명의 주체로 자임하던 학생들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학원을 넘어 사회로 눈길을 돌릴 수 있었다.

우선 학생들은 여름방학과 7·29 총선을 맞이하여 그들의 활동을 사회운동 차원으로 확대시키고자 농촌계몽운동과 신생활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였다. 또한 이들 운동은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몰락 이후 다시 고개를 드는 일부 구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혁명세력'의 반동에 대응하여, 혁명정신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혁명 주체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와서 총장·이사장 사택파괴 등의 유혈폭력사태로 폭발했다. 이로 인해 학생 133명이 구속되었다(연세춘추 1960/11/21).

추진되었다(박찬호 1991, 221).

학생들은 무엇보다 '혁명정신'의 확산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승만 독재가 무너짐으로써 일견 혁명이 끝난 듯 보였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혁명의 주체로서 이승만 정권 붕괴 이후에도 혁명의 열기가 지속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서는 혁명정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모든 국민들이 혁명 대열에 동참할 수 있어야 했다.

먼저 학생들은 농촌으로 달려갔다. 1960년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성균관대 학생들은 '민주사상고취계몽대'를 만들어 활동했다. 이 계몽대의 17명 학생들은 주로 대구, 안동, 영주, 경주 등 경상도 지역을 순회하며 "4·19 혁명 이후 수습대책의 방법 및 학생들의 동태", "농민들의 민주사상 앙양과 4·19혁명의 의의", "우리 학생들의 일치단결로 제2공화국 탄생에 협조" 등 9개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준법정신, 권리와 의무 인식, 신중한 투표 등을 강조했다(주간성대 1960/06/01). 성균관대 '민주사상고취계몽대'는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농촌계몽운동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먼저 학생들은 농촌을 '계몽'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일제시대 이래 이어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 계몽운동은 혁명의 완수를 위해 앞으로 실시될 총선거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었다. 즉 4월혁명의 무풍지대였던 농촌, 여촌야도 현상에서 드러나듯 자유당의 주요 기반이었던 농촌, 무엇보다 후진적인 한국사회에서도 가장 낙후된 농촌에 혁명정신을 확산시키지 않고서는 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당시 농촌계몽운동 속에 담긴 것이다.

1960년 6월 10일에는 서울대 학생회가 농촌에서의 국민계몽운동과 도시에서의 국민신생활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대학신문 1960/06/13), 6월 16일 국민계몽운동 단과대학별 조직 일원화 작업에 착수했다(대학신문 1960/06/20). 결국 7월 6일 서울대 국민계몽대가 결성되어 7월 8일부터 거의 전교생 전원이 전국 각지의 농촌으로 파견되었다(대학신문 1960/07/11). 서울대 국민계몽대는 출범과 더불어 4월혁명 정신의 보급, 국민 정

치의식과 주권의식의 고양, 경제복지의 추구, 신생활체계의 수립, 민족문화의 창조를 강령으로 내걸었다. 즉 이것은 혁명의 완성이란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들(특히 농민들)의 정치의식의 고양과 새로운 문화의 정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개량주의적 사회인식을 근저로 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 국민계몽대에는 신진회 핵심멤버이자 훗날 민통련의 지도부를 형성하는 이영일, 이수정 등이 적극 참여했다(윤식의 증언 2001, 177).

여러 대학이 연합해서 계몽대를 조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국대 등 서울시내 6개 대학 학생들은 '7·29 선거계몽대'를 조직하여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를 순회하며 선거 계몽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낮에는 시장에서 연설회를 갖고, 밤에는 영사기를 들고 국민학교 교정에서 "선거는 이렇게," "이 강산 좋을시고" 등을 상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몽대는 농민들에게 7·29 총선에 임하는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농촌 피폐의 근본 원인, 협동조합의 기능과 실효, 청소년 4H구락부의 필요, 외래품 밀수의 한국경제 파괴와 재벌, 경제면에 있어서 이승만 정권의 모순성과 시정책 등과 같은 생활경제적 측면에서의 계몽도 함께 진행하였다(동대시보 1960/08/15).

7·29 총선 이후에도 농촌계몽운동은 계속 이어졌다. 연세대는 서울대와 같은 취지로 8월 3일 지역사회개발사업과 계몽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지역사회개발대'를 결성하였다(연세춘추 1960/08/15). 지역사회개발대는 그들이 들어가는 농촌에 향후 5년 동안의 장기적 개발활동을 벌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연세의 마을')을 시범적으로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밖에도 여러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계몽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계몽운동들은, 농촌에 대한 경험도 없고 계몽을 위한 시설도 구비되지 않은 채 오로지 의지만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기 어려웠다. 7·29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기성정치인들의 압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하면서 농촌에

서의 계몽활동은 중단되었다.

1960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이 되자 일부 학교에서 다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일례로 서울대의 경우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농촌으로 파견될 계몽대를 조직하였다(대학신문 1960/12/12). 지난 여름방학의 농촌계몽운동에 비해 그 열기가 많이 시들기는 하였지만 학생들은 좀 더 계획적, 조직적, 효과적인 계몽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61년 봄에 접어들자 전국적으로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심각한 기근이 나타났다. 그해 3월 현재 식량부족 때문에 정부의 구호를 요청하는 농가수는 총 22만 가구에 육박했고 이를 인원수로 따지면 115만 명 이상이었다(김정원 1985, 257). 이때부터 학생들의 농촌계몽운동은 '절량농가 구호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연세대는 1961년 4월 9일 '절량농가 구호반'을 결성하여 모금활동 등을 통해 모은 구호금을 농민들에게 전달하고 아울러 농촌지방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연세춘추 1960/04/10). 4월 30일에는 절량농가 구호반 제2진을 파견하여 낙농운동을 보급함으로써 일시적인 구제가 아닌 절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였다(연세춘추 1961/05/01). 고려대도 4월 7일 학생들의 모금활동으로 모인 구호금과 함께 '절량농가 실태조사반'을 농촌으로 파견하였다(고대신문 1961/04/15). 이러한 절량농가 구호운동은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갑자기 추진된 운동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수는 매우 적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학생들은 농촌의 현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으며,[5]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도 학생들이 농촌·농민운동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농촌에서 국민계몽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도시에서는 신생활운동이 전

5) 이전의 농촌계몽운동과는 달리, 이때부터는 당시 농촌의 현실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가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특히 학생들은 장면 정권이 '국토개발사업'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개되었다. 신생활운동의 주장은 도시인들의 허영과 사치, 향락과 안일을 몰아내고, 독재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기생한 모든 사회악을 척결하며, 외래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여 자립경제 달성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망국 사치품 건국 국산품", "한 가치 양담배에 불타는 우리 조국", "사치와 향락 속에 시드는 국민정신", "농민의 흘린 피땀 사치로써 낭비 말라", "오늘의 커피는 내일의 독배"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이러한 운동은 일제강점기 '토산품' 애용을 주장한 물산장려운동의 맥락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8, 231).

먼저 서울대 학생회는 1960년 6월 10일 국민경제생활 중심의 신생활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서울대 여학생회도 "현재 요구되고 있는 국내 자립경제의 내외혁신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일체의 사치와 허영, 불의, 낭비를 배격하기로 결의했다(대학신문 1960/06/13). 이에 7월 7일 서울대 신생활운동반이 결성되었다. 신생활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유당 시대의 부정부패가 특정 정치인의 도덕적 타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정신자세의 해이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김동춘 1988, 37). 또한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족 주체성이 뚜렷해야 하고 사치와 허영과 낭비를 배격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장벽을 허물고 공동의 심리적 구심점을 향해 민족의 에너지를 집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갖고 있었다.

서울대 신생활운동반은 7월 16일 세종로에서 양담배를 모아 소각하는 집회를 가졌고, 8월에는 관용차 91대를 고발하였다. 또 9월 22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가넘버 차량 51대를 시청 앞에 유치시켜 놓고 가넘버 차량의 폐지와 신생활운동의 입법화 그리고 한미행정협정 체결을 요구하였다(대학신문 1960/09/26). 그러나 다음날 정부가 이러한 직접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다시 하면 단속, 입건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한편, 10월 8일 장면 총리가 국민계몽대 대장 안병규를 비롯한 전국 학생 대표 4명을 만나 신생활운동 입법화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하면서 신생활

운동의 열기는 급속히 식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8, 232). 이후 활동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서울대 신생활운동대가 196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부터 13일 동안 광화문 네거리에 포진하여 허례허식 타파를 위한 계몽운동을 벌이는 정도였다.[6]

신생활운동은 1961년 초부터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61년 2월 6일 '대한민국대학생총연합회'[7]는 재경대의원대회를 열어, 한국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일 방편으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개발사업에 대학생이 독자적으로 헌신할 것을 결의하고 신생활운동의 합리적이고도 전국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대학신문 1961/02/13). 이 자리에서는 신생활운동에서 가두활동을 일체 금지하기로 하고, 신학기부터 각 대학 단위별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치적인 학생 자신의 신생활운동부터 일으키되 먼저 검소한 교복을 입기로 하고 그 모양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데 합의를 보았다(단대학보 1961/02/11). 이후 각 대학 학생회는 신생활운동의 활성화를 시도했다. 한양대의 경우 4월 25일 전국여학생회 차원에서 신생활운동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한양대학보 1961/05/01). 이화여대의 경우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전 반장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각계에서 부르짖고 있는 신생활운동을 적극 실행하기로 하고, 먼저 여름에 각색의 양산을 쓰지 않는 운동을 벌인 후 점차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모든 사치품 및 외래품을 쓰지 않기로 결의했다(이대학보 1961/05/15). 1960년 신생활운동이 주로 서울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에 비해 1961년 신생활운동은 그 저변이 훨씬 넓어졌다. 그러나 운동의 내용은 오직 학생들에게 의식개혁과 내핍생활을 계몽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

6) 원래 이 신생활운동대는 연말연시에 수수되는 뇌물왕래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들 집 앞에 포진하고자 하였다(대학신문 1961/01/09).

7) 이 단체는 전국의 각 대학 학생회의 연합체로서 결성경로는 분명치 않으나, 1960년 11월 23일부터 3일간 경희대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갖고 출범하였다(대학신문 1960/11/21).

농촌계몽운동과 마찬가지로 신생활운동 역시 혁명정신의 확산을 위해 도시에서 전개한 계몽운동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말하는 혁명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사실 4월혁명 자체가 명확한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항쟁 당시 구호가 "부정선거 다시 하라"에서 "이승만 하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혁명정신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당시 한국의 현실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고 곧바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만으로 한국사회의 모순이 해결될 수는 없었다.

학생들은 엘리트로서 한국사회의 모순에 민감했다. 당시 학생들이 인식했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사회의 '후진성'이었다. 즉 그들이 책에서 보고 배웠던 이상적인 사회(특히 서구와 같은)와는 모든 면에서 거리가 있었던 한국사회의 현실이었다.[8] 4월혁명 전후 대학 학보에 실린 다음의 기사들은, 당시 학생들이 일상에서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 "나라 안이 고루 고루 문명의 혜택을 받기란, 여간한 부국이 아니고서는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도시와 지방과의 문명의 발달 정도가 가까울수록, 그 나라의 후진성은 극복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후진성을 면하기 위해서, 도시 문명이 넘쳐서 저절로 지방에 흘러 들어가기 바란다면, 가난한 나라, 남의 나라의 도움이나 받아서 겨우 지탱되어 가는 나라에서는 백년 하청(河淸)을 기다리는 격에 지나지 못한다(연세춘추 1959/02/22)."

8) 당시 각 대학의 학보의 특징은, 서구나 제3세계와 같은 외국의 소식을 알리는 기사가 많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함께 그에 대비되는 한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우리의 현실은 후진지역의 성격을 그대로 지닌 각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명동거리와 남산의 토굴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름도 모를 고급의 상품들이 찬란하게 놓인 진열장과 건물들 그리고 사람의 물결이 있는가 하면, 일년 내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축축한 토굴의 핏기없는 생활이 있는 것이다. 거의 100미터의 거리를 두고 화려와 초라함이, 사치와 비참이 대결하고 있다. 쇼핑과 구걸, 고급상품과 깡통, 이것이 바로 한국의 양지와 음지가 아니겠는가?(이대학보 1960/07/04)"

1950년대 학생들은 빈곤과 불평등에 기반한 한국사회의 후진성에 괴로워하고 절망했지만 그들 스스로 이러한 현실을 바꿀 힘과 의지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무기력하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4월혁명을 통해 학생들이 혁명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혁명의 주체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구조적인 사회개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촌과 도시의 민중들에게 후진적인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타파의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혁명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론인 '계몽운동'의 본질이다.

계몽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후진성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자립경제 건설이었다. 당시 용어로 '민생고'라고 하는, 즉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완수는 불가능했다. 또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체제의 수립 없이는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은 장미꽃은 필 수 없었다(이대학보 1960/06/06). 이를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제시됐던 4월혁명의 정신과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민생고의 해결은 한국사회의 후진성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그것은 당연히 '경제재건'으로써 달성해야 할 것이었다.

1950년대의 경제는 한마디로 원조경제였다. 따라서 새롭게 재건되는 경제는 원조경제의 폐해들을 극복해야만 하며 이것은 자립경제의 건설로만 가능했다. 자립경제의 수립을 통한 경제의 재건 그리고 한국사회 후진성 극복은 4월혁명 당시 학생들이 추구한 한국사회 발전(혹은 변혁)지향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1960년 9월 29일에 시내 13개 대학 경제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전국자립경제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이들은 자립경제만이 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대신문 1960/10/08). 대체로 학생들은 과감한 계획경제를 실시함으로써 자립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대학신문 1960/11/28).

구조적인 개혁 없이 추진되는 '계몽운동'의 한계는 명확했다. 그러나 농촌계몽운동과 신생활운동을 평가하면서 계몽운동 일반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 운동이 당시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이다. 특히 신생활운동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60년 9월 24일 시내 58개 고등학교의 6,700명 학생들이 모여 서울대 국민계몽대의 지휘 아래 신생활계몽운동대를 결성하고 신생활운동 입법화와 자립경제 확립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정계정 1997, 473). 또 국회의 소장파 의원들이 학생들의 신생활운동에 호응하여 이른바 '청조운동'을 일으켰고,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이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윤보선 대통령도 이러한 움직임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이를 적극 격려하였다(한양대학보 1961/02/20).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61년에 들어와 신생활운동의 저변은 정부의 국토개발사업과 결합하여 보다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계몽운동 과정에서 서울대 신생활운동반이 한미행정협정 추진을 요구한 사실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소위 'P·X 경제'와 관련이 있다. 신생활운동에서 가장 배격했던 것이 '양담배'로 대표되던 사치성 수입품들이었다. 이는 당시 한국사회에 범람하고 있던 사치성 수입품들이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

고 이러한 사치성 수입품들이 범람할 수 있었던 원인은, 미군부대 P · X에서 상당수의 수입품들이 불법으로 반출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불법을 단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사치성 수입품 배격에 앞장서던 학생들은 이러한 불법을 막기 위해 한미행정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게 되었다(연세춘추 1961/02/27). 물론 한미행정협정 체결 주장은 주한미군 주둔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 1961년 2월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 당시 민통련 주도의 학생투쟁위원회에서 배척된 바 있었다(황건의 증언 2003). 그러나 신생활운동이 기본적으로 자립경제 수립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미행정협정 체결 요구는 의식개혁을 넘어 한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국을 직접 문제 삼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5 · 16쿠데타 직후에도 학생들은 미군범죄 처리와 관련하여 한미행정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문제는 농촌계몽운동과 신생활운동이 구조적 모순을 무시하였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있지 않다. 당시 학생들은 혁명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지만 "학생은 순수하다" 혹은 "순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 결과 1960년 7월 농촌에서 벌인 선거 관련 활동과 1960년 9월 서울대 신생활운동반이 전개한 직접행동은 학내외에서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학생의 순수성'은 이미 이승만 하야 직후 학생들이 혁명의 주체로 자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강조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내외 비판은 계몽운동의 정치적 소극성을 끊임없이 강제하는 역할을 했다. 결국 농촌계몽운동은 방학 때마다 벌어지는 연례적인 행사로, 또 신생활운동은 학생들의 국산품애용과 근검절약을 추구하는 학내 캠페인으로 축소되었다.

3. 민통련 조직과 통일운동

1) 통일논의의 확산

이승만 정권이 몰락한 후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학원민주화운동을, 대외적으로는 농촌계몽운동과 신생활운동을 추진하던 학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한국사회 후진성 타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이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서울대의 경우 1950년대부터 활동했던 반공개 이념서클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들은 7·29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빛이 바랜 농촌계몽운동과 정치적 소극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신생활운동을 넘어서는 학생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정치현실과 연관성을 가지고 좀 더 이념적인, 그러면서도 학생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는 통합적인 학생운동체를 만들고자 했다(윤식의 증언 2001, 178). 그 결과 문리대의 신진회, 후진사회연구회, 법대의 사회법학회 등을 주축으로 1960년 11월 1일 발기대회를 거쳐 18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이 결성되었다.

당시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던 학생들이 '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은 7·29 총선 이후 고조된 통일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7·29 총선 당시 여러 혁신계 정당들은 다양한 형태의 통일방안을 제출한 바 있었다. 국외에서도 김삼규, 김용중 등이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여기에 미국의 상원의원 맨스필드가 한국의 오스트리아식 통일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그 결과 점차 많은 사람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기서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통련이 발족되기 이전부터 '통일'과 '민족' 문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나 강연회가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주요 대학에서 개최되고 있었다(성유보 1983, 131). 1960년 9월에 고려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 시국토론대회'(고대신문 1960/10/01)와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통일문제 심포지엄'(대학신문 1960/11/07) 등은 그 대표적

사례였다.

그러나 당시 고조된 통일논의만이 민통련 결성의 유일한 배경은 아니었다. 민통련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와 공산진영이 표방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를 모두 비판하는 민주사회주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의 이러한 민주사회주의 지향은 당시 제3세계 국가들의 비동맹운동과 맞물려 민족주의와 결합하였다.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한국사회를 제3세계 민족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학생들은 한국사회 후진성의 근본원인을 분단모순과 외세의존에서 찾았다. 또한 '스푸트니크' 위성으로 대표되는 소련의 발전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급속하게 경제 재건을 이룬 북한의 성장에 주목한 학생들은 남북의 평화공존, 교류, 통일 그리고 자립경제의 수립을 후진성 극복의 해결책으로 생각했다(오제연 2007, 289-290). 이러한 역사적 맥락 위에 4월혁명 직후 고조된 통일논의가 더해져서 서울대 민통련이 조직된 것이다.

서울대 민통련은 그동안 전개된 학생회 중심의 계몽운동을 무이념적 운동이라고 비판하고, 민족주의와 통일을 학생운동의 지상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들은 한국사회 모순의 근본원인을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단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분단을 깨트려야 한다고 믿었다(대학신문 1960/11/14).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회 측은, 모든 학생운동은 학생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민통련을 포용하려는 자세를 보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생회의 권위를 인정한 위에서 그 밑으로 민통련을 끌어드리려는 시도에 불과했다.[9] 정치적 소극성을 드러내며 학내 문제로 침잠하던 학생회는 운동의 중심에서 점차 밀려났다. 반면 농촌계몽운동과 신생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은 민통련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이영일의 증언 2003).

---

9) 서울대의 경우, 학생회는 민통련이 '서울대' 라는 명칭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대학신문 1960/11/14).

민통련의 통일운동은 한국사회 후진성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계몽운동 과정에서 한국사회 후진성 극복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된 자립경제 수립은, 통일운동에서도 핵심적인 주장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1960년 9월 24, 25일 양일에 걸쳐 고려대에서 있었던 '전국대학생 시국토론대회' 에서는 기형적 경제상태를 바로잡아 자립경제를 수립하는 문제와 통일을 연결시키고, 막대한 군비를 통일을 통해 경제부흥에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중석 1991, 146). 1960년 10월 11일 동국대학교 학생시국강연회에 나온 학생연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음성적으로 침투하는 침략의 식민정책 같은 것은 단호히 경계하면서 경제적 자립으로 주권을 확보하여 통일된 민족을 이룩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였다(동대시보 1960/10/15). 1960년 11월 2일 서울대에서 열린 '통일문제 심포지엄' 에서도 통일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는데, "공통점은 경제자립" 이었다(대학신문 1960/11/07). 이렇듯 자립경제 수립은 통일운동과 계몽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공통분모였다.[10)]

서울대 민통련 조직 이후 각 대학에서 '민족통일연맹' 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이름의 각종 통일운동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서울대 민통련은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 필요성에 따라 서울시내 '조선일보사' 뒤에 사무실을 얻고 각 대학에 민통련 조직 결성을 시도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러한 시도와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통일운동 조직이 결성되었다. 그 결과 1960년 12월 이전에 서울의 경희대, 건국대, 국학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에서 조직 결성이 완료되었고, 지방의 부산대, 수산대, 경북대, 대구대, 전남대, 조선대 등에서도 조직 작업이 추진되었다(박태순 · 김동춘 1991, 128; 윤식의 증언 2001, 180-181). 이때부터 '통

10) 당시 통일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용중도 1961년 2월 중순 장면 총리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하루빨리 자주적 경제력을 갖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족일보 1961/02/19 · 20).

일운동' 은 학생들을 혁명의 대의 안으로 다시 한번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과 2대악법반대운동

1960년 11월 18일 서울대 민통련이 결성되었지만, 겨울방학이 곧바로 이어진 관계로 본격적인 활동을 즉각 전개하기는 어려웠다. 민통련 핵심 멤버들은 겨울방학 동안에도 서울에 남아 주로 책이나 정세에 대해 토론하며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황건의 증언 2003). 그러던 1961년 2월 8일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한미경제원조협정' 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은 미국이 한국에게 공급하는 원조물자에 대해 미국이 임의로 원조계획을 중단하고 또 그 원조의 사용에 대해 감독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한국이 정부예산의 절반 이상을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협정은 미국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혁신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으며, 한창 통일과 민족주의의 열기를 드높이고 있던 학생들도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1961년 2월 12일 각 대학 민통련과 서울대 국민계몽대 등이 주축이 되어 '한미경제협정반대 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 를 결성하였다.[11] 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는 2월 14일 낙원극장 앞에서 약 100여 명이 모여 성토대회를 갖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은 "오늘 우리 조국은 아직도 외세에 의하여 분할지배되고 있으며 갖은 굴욕과 참극을 강요당하여" 왔다고 규정하고, "민족의 분할을 영구화하고 조국의

11) 여기에는 서울대 민통련, 고대 민족전선 발기준비위원회(가칭), 항공대 민통련, 건국대 민족통일연구회 발기준비위원회, 성균관대 민족통일연맹 발기준비위원회, 외국어대 민족통일연구회 발기준비위원회, 단국대 민족통일연구회 발기준비위원회, 민족통일문제연구소, 경희대 민족통일문제연구회, 서울대 국민계몽대, 전국학생조국통일추진회가 참여했다(민족일보 1961/02/15).

주권을 굴욕적으로 침해하는 한미경제협정"은 을사조약보다도 더 가혹한 예속적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했다(민족일보 1961/02/15).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 한국을 분단하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식민지처럼 지배함으로써 전쟁과 빈곤과 같은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반외세 민족혁명론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서중석 1991, 134-13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8, 320).

한미경제협정은 미국의 대한원조와 직접 관련된 협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운동은 자연스럽게 자립경제 수립 주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즉 빈곤 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원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오직 가능한 것은 민족 자립적 경제체제의 확립 밖에 없는데, 민족 자립적 경제체제의 확립은 통일 없이는 이룩할 수 없는 만큼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였다(민족일보 1961/02/15). 그러나 한미경제협정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종속적 원조경제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운동도 사회적으로 그다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 역시 2월 14일 집회와 2월 21일 명동성당 앞에서 가진 성토대회를 제외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민족일보 1961/02/22). 오히려 이 운동이 '반미운동'으로 확대 해석되는 문제로 인해 곤란에 처해지기도 했다(대학신문 1961/02/20). 결국 한미경제협정은 1961년 2월 28일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동의로 비준되었다.

반면 3월부터 시작된 '2대악법반대운동'은 보다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2대악법'이란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을 일컫는 것으로서,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과 같은 학생들과 민중들의 저항에 위기의식을 느낀 장면 정권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구상한 것이었다. 물론 각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즉각 이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장면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난하고 나섰다. 학생들 역시, "2대악법이 통과되면 국토통일 영 못 본다"라는 구호와 함께 민통련이 중심이 되어 1961년 3월 16일 17개 학생 단체가 참여한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12)]

3월 18일 대구에서 2대악법 제정에 반대하는 약 1만 명이 모여 시위를 전개한 이후 시위는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3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반민주악법반대성토 대강연회'는 1만 5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2대 악법은 물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장면 내각은 총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연회를 마친 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1천여 명이 "데모가 이적이냐 악법이 이적이냐", "배가고파 못살겠다" 등의 플래카드와 횃불을 들고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8, 329-330). 경찰은 이날 시위에서 윤식, 이창홍 등 민통련 학생들을 검거하여 구속한 후,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가 과격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간부 27명 중 위원장 노정훈을 비롯하여 하일민, 황건, 김정강 등 10명을 체포하였다(민족일보 1961/03/27). 이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계속되었다.

경찰의 강력한 탄압 이외에도, 학생들이 혁신계에 사주를 받았다는 유언비어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3월 23일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는 위원장 노정훈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탄압 일관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동정권은 본 투위의 대표 노정훈 동지와 통일사회당의 고정훈 선생을 고의로 신문지상에 클로즈업 시킴으로써 우리 투위를 혁신제당의 사주를 약간이나마 받은 것처럼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있다. 본 학생투위는 악법반대의 전 민족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민족적 양심에서 결성되고 그에 따라 공투위(혁신계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공동투쟁위원회—필자 주)와의 공동투쟁 전열에 참여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민족일보 1961/03/25). 앞서 계몽운동의 정치적 소극성을 강제했

12) 전국학생투쟁위원회에는 전한국학생총연맹, 서울대 민통련, 고려대 민족통일전선, 성균관대 민족통일전선, 전국학생자립경제추진회, 전국학생혁신연맹, 항공대 민통련, 계랑단, 건국대 민족통일전선, 피양민학살유족회 중앙학생위원회, 단국대 민통련, 외국어대 민족통일전선, 민주학생통일연맹, 민족통일연구소, 동국대 민통련, 중앙대 민통련, 전국근로고학생총연맹 등이 참여했다(민족일보 1961/03/20).

던 "학생은 순수하다"는 인식은 이 운동에서도 일종의 강박증으로 운동 주체들을 계속 따라다녔던 것이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각 지방의 2대악법반대운동은 4월 이후에도 계속 확산되었다. 특히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대도시 지역의 시위 규모가 컸는데, 여기에는 지역 고등학생들도 많이 참여했다. 거센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장면 정권은 4월 국회를 연장해서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나아가 이른바 '비둘기작전'으로 알려진 군 투입 계획을 수립하여 군을 동원해서라도 반대시위를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 그러나 보수야당인 신민당마저 여론 악화를 이유로 2대법 제정과 관련한 여당과의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자, 결국 장면 정권은 두 법안의 상정을 포기했다. 2대악법 제정이 무산된 것이다. 오히려 민통련과 같은 통일운동단체들은 2대악법반대운동을 계기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조직을 확대할 수 있었다. 장면 정권은 통일운동의 불길을 잡으려다가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3) 남북학생회담 제안

1961년 4·19 제1주년을 맞이하여 사회 전반에 '3·4월 위기설,' 즉 4·19 제1주년을 맞이하여 민중봉기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설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혁명의 주체였던 학생들은 위기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날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기념행사를 침묵시위나 각 학교 중심의 독자적 기념식 정도로 조용히 치렀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서울대 '4·19 제2선언문'은 이후 학생운동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서울대 '4·19 제2선언문'은 명목상 학생회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민통련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것이었다(홍석률 1997, 120). 이 선언문에서 학생들은 "지금 이 땅의 역사를 전

진(前進)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 위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뿐이다. 이 민족혁명 수행의 앞길에는 깨어진 조국의 민족통일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4·19에서 흘린 피를 더럽히고 반민족적 방향으로 역류시키는 어떠한 반민족적인 세력도 타도"할 것과 "조국의 자주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와 이에 결탁하는 사대주의 세력을 일체 배격"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당시 민통련의 민족주의 노선이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에 기반하는 민족혁명론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선이 학생회를 포함한 일반 학생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오제연 2007, 292).

김정강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선언문의 실제 작성자는 민자통(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과 민민청(민주민족청년동맹)의 핵심인사였던 부산대 교수 이종률이었다. 즉 이종률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김성립을 통해 서울대 민통련의 김정강을 접촉하여 "한국 학생운동은 앞으로 변혁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초기부터 이론적 지표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며 자기가 4·19선언문을 써서 보내겠다고 했고, 결국 이종률이 쓴 선언문을 민통련 지도부가 통과시켰다는 것이다(김정강의 증언 2001, 45-46). 물론 이 주장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종률이 민족혁명론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그라는 점에서 민족혁명론에 기반한 4·19 제2선언문이 이종률과 관련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앞서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에서 살펴보았듯이 민통련 학생들은 민족혁명론으로 점차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큰 거부감 없이 4·19 제2선언문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넘긴 채 4·19 제1주년이 지나가고 또 민족혁명론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민통련의 통일운동은 급진전되었다. 1961년 5월 3일 서울대 민통련은 대의원 회의에서 논란 끝에 '남북학생회담'을 공식 제안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남북학생회담의 의제는 학생기자 교류, 학술토론대회 개최, 예술, 학문, 창작 교환, 체육대회 개최 등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5월 5일에 18개 대학이 참여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약칭 민통전학련)' 이 결성 준비대회를 갖고 5월 내로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13] 또한 이날 결성준비대회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은 그때까지 학생들이 주장한 민족혁명론적 통일관을 집약하였다. 이 선언문은 세계사적 현단계의 기본적 특징을 식민지, 반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의 승리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식민지적 반식민지적 반봉건성의 요소는 해방 후 군사기지적 예속성이 부가되고 비합리적인 원조정책이 가중되어 더욱더 매판성과 예속성을 띠게 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반영하는 매판관료세력들과 대중 간의 모순은 현실적으로 통일세력 대 반통일세력 간의 모순으로 나타났지만, 4월혁명을 계기로 민족, 대중세력은 매판관료세력을, 통일세력은 반통일세력을, 평화세력은 전쟁세력을 압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서중석 1991, 153-154).

남북학생회담의 추진은 이미 1961년 2월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서울대 민통련은 늦어도 4월까지는 전국 각 대학의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강력한 통일추진 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추진하려 했었다(대학신문 1960/02/20). 이 시기에는 학생들이나 혁신계뿐만 아니라 보수야당인 신민당의 소장파 의원들(청조회)도 서신교환이나 기자교환과 같은 남북교류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계획은 돌출적이거나 감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3·4월 위기설이 학생들의 운신 폭을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남북교류 추진이 당분간 유보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사이에 남북학생회담의 추진을 가속화시킨 사건이 유엔에서 일어났

13) 민통전학련에 참여한 학교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외대, 경희대, 항공대, 경북대, 대구대, 청구대, 부산대, 수산대, 전남대, 조선대, 국학대, 단대, 고대, 연대, 한양대, 성대, 국민대, 경북고(민족일보 1961/05/07). 그런데 다른 기록에는 여기서 수산대, 고대가 빠지고 대신 건국대와 동국대가 들어가 있다(대학신문 1961/05/08).

다. 당시 유엔에서 아시아·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던 유엔주재 미국대사 스티븐슨은 고육책으로서, 1961년 4월 11일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유엔의 자격과 권한을 수락하면 북한을 유엔에 참석토록 초청하자는 그 당시로는 폭탄적인 제의를 하였다. 북한조건부 남북동시초청안인 스티븐슨안은, 평화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전제로서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한 것이었다. 남한만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해 온 미국이,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대한 정책 수정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스티븐슨안은 북한의 무조건 초청을 주장한 소련과 인도의 제안을 물리치고 유엔에서 가결되었다(서중석 1991, 152-153). 유엔에서 벌어진 이러한 상황은 통일운동에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드디어 4·19 제1주년 행사 때 서울대 학생들은 "남북 학생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플래카드와 더불어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이북 쌀 이남 전기", "민족자주통일", "외세 물러가라", "남북 서신 교환",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와 같이 통일 관련 슬로건을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벌였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경제, 민생 문제와 관련한 슬로건이 많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자립경제 지향과 맞닿은 것으로 대중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1950년대에 이승만, 자유당 관계자들도 '북진통일'을 언급하며 통일이 되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선전했음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의식은 당시에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8, 344).

이후 경북대, 청구대, 대구대 등 대구지역 민통련 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 제안을 촉구하고 실행하기 위해 상경을 준비하기도 했다. 민민청, 통민청 관계자들도 서울대 민통련 간부들에게 조속히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8, 336). 4월 말부터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이 귀국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남북교류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서울대 민통련의 남북학생회담 제안과 민통전학련의 결성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민통련의 남북학생회담 제안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유엔에서의 상황변화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었던 장면 정권과 보수 우익 진영은,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추진을 비판하면서 이를 힘으로 막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혁신계는 이를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했다. 학생들의 경우 찬 · 반 양론이 엇갈린 가운데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민통련의 남북학생회담 추진에 비판적인 학생들은 이러한 방식의 운동이 일단 무모하고 시기상조이며, 만약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학신문 1961/05/11).

남북학생회담 추진이 예상 밖의 파문을 일으키자 민통련 학생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민통련의 주요간부들은 이 회담이 정치적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남북학생의 교류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에 바빴다. 급기야 5월 13일 민통전학련 결성준비위원회는 '남북학생회담 및 통일축제 개최에 관한 원칙 및 우리의 요구' 를 발표하면서, 남북학생회담에서 통일에 관한 정치적 또는 국제관계에 관한 문제는 일체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회담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북학생회담의 가부를 투표에 붙이자고 뒤늦게 제의하였다. 갑작스러운 투표 제안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 경우 회담은 상당기간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민족적 양심을 대변하며 민족분열의 비극 속에서 통일을 열망하는 새 세대의 회담 및 축제에 관한 제안을 각 정당사회단체는 승인하라. 또한 우리의 양심적인 제안을 농락 또는 세력확장을 위한 선전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민족일보 1961/05/16). 여기서 전자는 민주당 등 보수정당을 향한 요구였지만, 후자는 명백히 혁신계를 의식한 요구였다. 즉 학생들은 2대악법반대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혁신계와 거리두기를 시도한 것이다.

혁신계와 거리두기는 역시 5월 13일 서울에서 민자통이 남북학생회담을 지지하기 위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서울대 민통련이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이유로 불참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집회에는 학생대표

로 서울대 민통련의 류근일, 이영일, 경희대 민통련의 이수병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서울대 민통련은 사전에 이를 연락받은 바 없고 학생본연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류근일과 이영일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하였다(민족일보 1961/05/14). 이에 따라 이전부터 민자통과 연결되어 있었던 이수병만 학생대표로 집회에 참석하였다. 결국 서울대 민통련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이미 5월 중하순경에 예정된 민통전학련 결성대회에서 남북학생회담 추진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장면 정권의 요인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였다(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968-977; 윤식의 증언 2001, 185).

민통련 지도부는 계몽운동의 무이념성을 비판하면서 보다 이념적인 차원에서 통일운동을 추진했지만 이들 역시 계몽운동처럼 "학생은 순수하다" 혹은 "순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넘어서지 못했다. 물론 민통련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민민청이나 통민청(통일민주청년동맹) 등 혁신계와 직접 연결되기도 했지만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이영일의 증언 2003). 이념적으로도 민통련에는 '백색독재'와 '적색독재'를 모두 배격하는 민주사회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받아들인 학생들이 많았지만 일부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의 민족주의는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의 3반(反)에 기반한 민족혁명론으로 점차 수렴되고 있었지만, 반공 논리에 따라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이겨내기에는 이념의 통일성, 철저성, 구체성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다(오제연 2007, 292-293).

무엇보다 계몽운동이든 통일운동이든 당시 학생운동은 운동의 기반인 학생 대중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혁명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한 많은 학생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혁명의 주체로 호명하지 않았다(대학신문 1961/04/10). 얼마 전까지 학생들은 자신들이 혁명을 했다고 믿었지만, 정권이 바뀌었을 뿐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혁명 주체로서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에서

이전의 무기력하고 냉소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4·19 제1주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14] 혁명에 보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5%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혁명 전보다 현재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11.0%나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생활운동에 대해서도 90% 이상이 그 취지에 공감·동조하고 있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17.5%만이 동의를 하였고 34.2%는 아예 운동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도 않았다. 또한 학생회와 민통련을 포함하여 당시 난립하고 있었던 각종 학생 단체에 대해서는 46.5% 정도만이 그 필요성을 인정했고, 필요없다고 답하거나 관심없다고 답한 사람이 52.2%에 달하였다. 특히 학생 혁명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단 6.5%만이 긍정적으로 답했을 뿐,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거나 무의미한 활동이라고 답하고 있다. 민통련의 통일운동 역시 아직은 많은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조사에서, 22.4%만이 남북대표의 협상을 통한 통일을 지지했고 43.7%는 유엔감시하 남북총선을 지지했다. 또 남북통일의 시기에 있어서도 52.0%가 선건설 후통일을 지지하는 반면 34.4%만이 선통일 후건설을 지지했다. 이를 통해 볼 때 학생회든 민통련이든 이들의 활동이 광범한 학생 대중에 기반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자립경제 수립을 통한 후진성 극복이라는 한국사회 발전(혹은 변혁) 지향은, 학생회 중심의 계몽운동과 민통련 중심의 통일운동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으로 표출되고 각각 고양되었지만, 과거의 타성, "학생은 순수하다" 혹은 "순수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한 정치적 소극성, 이념의 불철저성과 추상성, 학생 대중의 폭넓은 호응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동요하다가 결국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5·16쿠데타로 일단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사회의 또 다른

14) 이 조사는 『연세춘추』에서 당시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연대생 3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연세춘추 1961/04/17).

엘리트 집단인 군부가 정치 · 경제 · 사회를 장악하게 되자, 학생들의 한국사회 발전(혹은 변혁)지향은 군부의 근대화론/민족주의/국가주의와 한편으로는 결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그 중 결합된 부분은 이후 30여 년 이상 한국사회를 이끌어 온 지배담론으로 전화하였고, 대립되었던 부분 역시 저항담론으로 전화하여 이후 민주화운동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맺음말

1960년 이승만 정권 붕괴 이후 1961년 5 · 16쿠데타 이전까지 학생운동의 흐름은 크게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원민주화운동, 농촌계몽운동, 신생활운동과 민통련(민족통일연맹)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 2대악법반대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부류의 운동은 주도세력과 운동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운동에서 학생운동 주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사회 발전(혹은 변혁)지향' 은 유사한 면이 있었다.

당시 학생들은 한국사회의 핵심모순을 '후진성' 에서 찾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혁명의 완수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계몽운동' 과 '통일운동' 이라는 방법론이 각각 모색되었지만, 그 속에는 자립경제 수립을 통한 후진성 극복이라는 공통의 한국사회 발전(혹은 변혁)지향이 담겨 있었다. 단, 계몽운동에서는 자립경제 지향이 내핍이나 국산품 애용과 같은 수준에서 제기된 반면, 통일운동에서는 외세의존청산, 남북교류, 분단극복이라는 수준에서 제기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두 운동 모두 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몽운동은 단순한 내핍, 국산품 애용 캠페인을 넘어 거리에서의 직접

행동으로 나아가고 또 당시 원조경제의 정점에 서 있는 미국을 직접 문제 삼기도 했지만, "학생은 순수하다" 혹은 "순수해야 한다"는 인식의 벽에 막혀 정치적 소극성을 드러냈다. 통일운동 역시 남북학생회담 제안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나 반공 논리의 거센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곧바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 대중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도 동요의 한 요인이었다.

이 글은 4월혁명 직후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그동안 잘 활용되지 않았던 각 대학 학보나 구술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자세하게 정리하고자 했다. 또 운동의 대립이나 주도세력 변화를 강조한 기존연구와 달리 학생운동의 공통 지향과 실천 시 나타나는 방법론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단선적인 시각에서 운동의 발전만을 언급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생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요 양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속에서 후진성 극복 지향을 언급한 관계로 '후진성' 담론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진성' 담론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지성계 전체의 인식 속에서 학생들의 지향이 갖는 위치와 의미를 밝혀야 할 것이다. '후진성' 담론과 '근대화' 담론의 관계도 앞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과학적 개념의 문제라기보다 담론이 만들어지고 통용되는 역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이러한 한계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고성국. 1990. “4월혁명의 이념.”『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 한길사.

고영복. 1983. “4월혁명의 의식구조.”『4월혁명론』. 한길사.

김동춘. 1988.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 · 19시기 학생운동.”『역사비평』 제1호.

_____. 1991. “4 · 19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그 한계.”『1950년대 한국사회와 4 · 19혁명』. 태암.

김성태. 1960. “4 · 19 학생봉기의 動因.”『성대논문집』 제5호(1983.『4 · 19 혁명론 I』. 일월서각에 재수록).

김정원. 1985.『분단한국사』. 동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8.『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박태순 · 김동춘. 1991.『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박찬호. 1991. “4월민중항쟁과 민족민주운동의 성장.”『한국현대사 2』. 풀빛.

서중석. 1991. “4월혁명기의 반미 · 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역사비평』 제14호.

성유보. 1983. “4월혁명과 통일논의.”『한국민족주의론 II』. 창작과 비평사.

안동일 · 홍기범. 1960.『기적과 환상』. 영신문화사.

이강현 편. 1960.『민주혁명의 발자취—전국 각급 학교 학생대표의 수기』. 정음사.

이재오. 1984.『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오제연. 2007.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민족적 민주주의’ 를 중심으로.”『기억과 전망』 제16호.

_____. 2008. “1950년대 대학생 집단의 정치적 성장.”『역사문제연구』 제19호.

정계정. 1997. “4월혁명기 학원민주화운동과 국민계몽운동.”『성대사림』 제12 · 13합집.

정기영. 1990. “4월혁명의 주도세력.”『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 한길사.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한국혁명재판사』.

홍석률. 1997. “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정강의 증언(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윤식의 증언(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이영일의 증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구술사료 수집을 위한 구술면담-이영일』).
황건의 증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구술사료 수집을 위한 구술면담-황건』).

『고대신문』.
『대학신문』.
『단대학보』.
『동대시보』.
『민족일보』.
『연세춘추』.
『이대학보』.
『주간성대』.
『한양대학보』.

투고: 2010.4.14 **심사:** 2010.5.18 **확정:** 2010.5.24